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6. 11. 2. Vol. 43

## 세계 경제 동향

### 미 연준, 기준금리 3.75~4.00% 동결…위원 2명은 0.25%p 인상 주장 ▌'26-10-28 FED

- 연준은 10월 28일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동결(9월 인상 후 첫 동결)
  - 표결은 10대 2로, 쿡 이사와 해머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0.25%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 성명은 경제가 "강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으며, 물가 상승률 2% 목표 복귀를 위해 정책 기조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더 확인하겠다고 언급

❖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환율 변동이 수입 사료·농자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 미 9월 PCE 물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6%↑…근원 3.1% ▌'26-10-29 미 경제분석국(BEA)

- PCE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했고, 근원 PCE(식품·에너지 제외)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1% 상승(8월 각각 3.4%, 3.0%)
  - 개인소득은 0.2%, 개인소비지출은 0.5%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0%로 정체, 실질 가처분소득은 0.3% 감소하고 저축률은 3.8%로 전월대비 0.2%p 하락

❖ 에너지발 물가 상승과 미국 실질소득 감소가 식품 소비와 수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 국내 경제 동향

### 3분기 GDP 전기대비 1.0% 성장…민간소비는 0.2% 감소 ▌'26-10-27 한국은행

- 2026년 3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0%, 전년동기대비 3.4% 성장
  - 설비투자(4.1%,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2.3%), 정부소비(1.9%)가 늘었으나 민간소비는 재화·서비스가 모두 줄어 0.2% 감소
  -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전기장비 중심으로 2.3%, 수입은 원유 등이 늘어 2.4% 증가. 농림어업은 재배업·어업 중심으로 전기대비 5.9% 증가

❖ 민간소비 감소가 외식·가공식품 등 농식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 10월 소비자심리지수 105.4로 1.2p 하락…기대인플레이션율 2.7% 유지 ▌'26-10-27 한국은행

-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전월 대비 1.2p 하락
  - 현재경기판단(82)과 향후경기전망(88)이 각각 1p, 2p 하락. 금리수준전망(127)과 주택가격전망(124)도 1p씩 하락
  -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았으며,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품목으로는 석유류 제품(52.6%), 농축수산물(36.0%), 공공요금(30.4%)을 꼽았고 농축수산물 응답 비중은 3.9%p 하락

❖ 소비자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석유류 등 생산비 요인이 부각되는 만큼 농업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의 동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OECD, 대규모 식품영양강화 규제 6대 원칙 발표…증거 기반·시장진입 장벽 완화 강조 ▌'26-10-28 OECD

- OECD는 「대규모 식품영양강화(LSFF) 규제를 위한 우수 실행 원칙」(10월 13일 규제정책위원회 승인)을 통해 미량영양소 결핍 대응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규제 체계 설계 방향을 제시
  - 비타민A·철 등을 밀가루·쌀 같은 주식에 첨가하는 영양강화는 비용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의무화만으로 취약계층 도달을 보장하지 못하며,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 없고 당 함량이 높은 음료·시리얼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
  - 6대 원칙은 ① 증거 기반 정책 대응 ② 성과 중심 규칙 설계 ③ 위험 기반 등록·인가 등 시장진입 장벽 최소화 ④ 효과적 감독 ⑤ 점진적·비례적 집행과 사업자 역량 지원 ⑥ 무역·공공조달 등 정책 일관성
  - 복잡한 등록·인허가는 소규모 생산자를 배제할 수 있어 디지털 원스톱 절차 등 행정 간소화를 권고

❖ 국내 영양 취약계층의 미량영양소 섭취 실태를 토대로 식품 영양강화 정책의 필요성과 규제 방향을 검토할 필요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대통령, '농어민과의 대화'…농지 전수조사·CPTPP 우려에 "불의의 피해 없을 것" ▌'26-10-26 대통령실

-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기조) 1차 산업을 비교우위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특별한 희생에는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 (농지) 상속 농지 처분 불안 제기에 대통령은 법정 조사를 70년간 하지 않았다며 투기 실태 파악이 목적이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농지은행 매입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답변. 장관은 내년 정부안에서 매입 예산을 올해(약 1.6조 원)보다 25% 늘렸으나 대기 물량 해소에는 약 1.2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
  - (CPTPP) 농축산업계는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을, 어업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약화를 우려.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입 논의 자체는 중단하기 어렵다면서 개방 이익을 보는 기업이 피해 농어민을 보상하는 방안(수출 부담금 등)을 거론(구체적 제도는 실무 협의 전)
  - (지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 원을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재확인했고, 공익직불금 인상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 농산물 공정가격 법제화 요구에는 모든 품목에 쌀값 지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재배면적·출하량 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을 제시

❖ 농지은행 매입 확대에 필요한 재원과 공익직불금·농어촌 기본소득 등 소득 지원 확대 방안의 재정 소요와 정책 효과 분석 필요